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 2025년 주요업무계획

도민과 탄소중립 실현, 생태힐링 환경 조성

5개 중점 추진 과제 실현

전북특별법 시행 따라 환경 산림분야 특례 시행 본격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3% 감축 목표 · 생태관광 활성화
악취 등 환경 위해로부터 도민 안전 확보 · 산림복지 확대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국장 송금현)은 10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도민과 함께 이루는 탄소중립 실현, 생태힐링 환경 조성’을 2025년 주요업무계획 비전으로 설정하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역의 성장과 자연환경 보전이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5개 항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송 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첫째로, 특별한 전북, 환경·산림분야 특례시행 본격화를 위해 올해는 전북특별법 특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로, 환경·산림 분야에서 다양한 특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5년부터 3년간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운영해 전북형 환경교육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립·군립공원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산악 관광지를 조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종합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로운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고 특색 있는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며, “전북특별법에 따른 4개 특례 지구·단지(농생명산업

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산악 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단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국장은 “둘째로 기업과 도민이 함께 하는 탄소중립 추진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3%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며, “이를 통해 전북은 탄소배출 저감뿐만 아니라,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류형 관광지 기반을 확대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전주 만경강-백석제 국가 생태탐방로를 비롯한 남원 지리산 예고 촌, 고창 탐사르 온곡습지센터 등 지역 자연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내고,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 우수 생태자원을 국제적 수준의 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국장은 “셋째로, 환경 위해로부터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민 생활환경



송금현 전북특별자치도청 환경산림국장이 10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선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후화된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사업을 확대해, 5,419동에 213억 원을 지원하고, 악취 저감 사업도 확대 시행하여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악취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친환경 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주변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하며, “구체적 실천을 위해 친환경 차 9,106대(전기차 8,509대, 수소차 597대) 보급, 전기 총 전기 1,072기(1만3,928기→1만5,000기),

수소 충전소 8개소(신규 1, 계속 7)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 오염물질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이차전지 폐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단지 내 완충 저류 시설과 공공 폐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통해 도내 환경오염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 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융합호와 육점호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전북 물포럼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주요 상수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안정적인 물관리 기반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전북혁신회의

서신동 혁신회의 결성

더민주전북혁신회의가 전북특별자치도 내 읍면동 조직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10일 오전 전주시 서신동 지역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서신동혁신회의의 결성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방용승 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와 박지원 전북공동대표를 비롯, 서신동 주요 회원 1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신동 혁신회의는 김용권(54) 상임위원을 대표로 선임했다.

서신동 혁신회의는 향후 정례적으로 모임을 열어 200여 명의 혁신위원 확보를 목표로 풀뿌리 조직을 넓혀나가기로 했다.

서신동 혁신회의의 김용권 대표는 “서신 지역의 모든 아파트와 주거지역에서 상임위원 및 혁신위원들을 위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혁신회의의 방용승 공동상임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민주당의 당원주권주의 실현과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읍면동 별 조직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서신동 혁신회의가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신동 혁신회의의 결성은 전국 및 전북 지역 내 읍면동 조직으로서 처음이며, 가장 기초단위의 모임이어서 주목을 끈다.

그동안 도내 시·군 단위 조직 구성에 힘써온 전북혁신회의는 지난달 12일 제2기 출범식을 통해 내란 사태의 조기 종식과 정권교체를 위해 1만 명의 혁신위원을 조직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



민주 원윤준 의원, 정읍서

2024년 의정보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원윤준 의원(정읍·고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지난 8일 정읍시 예술회관에서 ‘위기를 기회로, 2024 정읍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전국에 내린 기록적 폭설과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8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엄중했던 국정 상황과 지역 현안을 딱딱하지 않게 이야기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치가 희망이 되겠습니다”라는 주제에 걸맞게, 의정보고회의 내용은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온 의정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채워졌다.

계엄 사태·탄핵 정국을 비롯한 최근의 정치 상황과 입법·정책 활동 성과, 정읍 주요 현안사업, 민원해결·예산확보 내역과 22대 국회에서 정읍의 변화를 위해 추진할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원윤준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지난 총선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신 정읍시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저에게 주어진 책무와 역할 등을 잊지 않고, 앞으로 남은 3년도 최선을 다해 정읍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원윤준 의원은 8일 정읍에 이어 15일에는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고창주민들과 함께하는 의정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전북특별자치도당을 방문해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전북도당 관계자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탄핵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전북도당과 간담회

“내란 종식 · 헌정 수호 위한 연합군 주도적으로 구성”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전북특별자치도당을 방문해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탄핵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황현선 사무총장이 동행해 당 내외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김선민 대표 대행은 인사말에서 “2025년 대선의 의미는 극우 파시즘 세력을 완전 종식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민주당만으로는 부족하다. 연대의 힘으로 극우 파시즘 세력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권교체의 핵심선 역할을 하는 조국혁신당이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를 위한 연합군을 주도적으로 구성하겠다”며, “이 연합군에는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민사회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군 구성을 위한 실무 협상을 맡고 있는 황현선 사무총장은 “민주당과 두세 차례 연합군 구성과 명칭을 논의하는 미팅을 가졌으며,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합군 구성이 완료되면

대규모 공동 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당 정도상 위원장은 “중앙당에서 제안한 원탁회의가 지역에서도 구성될 수 있도록 전북 차원에서 이를 제안할 계획”이라며 중앙과 지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참석한 당원들은 기소청 신설을 포함한 검찰개혁 방안과 국민의힘에 대한 위원장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토론했다. 또한, 새만금 기본계획 중단, 특별자치도 및 전북의 독자적인 광역권 설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제도 논의됐다.

이울라, 참석자들은 “이주 여성의 권리 보장 및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며, 조국혁신당이 사회권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추진에도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당원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연합군 구성을 통해 2025년 정권교체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윤석열 발탁 두고두고 후회”

문 전 대통령 “검찰총장 발탁, 윤 대통령 탄생의 단초
정권 넘겨줬다는 자괴감 커…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발탁과 관련해 “두고두고 후회된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아픈 손가락”이라며 “가족들이 품비박산나 한없이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10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가장 단초가 된 것이니까 후회가 된다”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을 가까이에서 겪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육박기를 잘하는 그런 성격이고, 말하자면 자기 제어를 잘 못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며 “나중에 보면 다 사실로 그 말이 맞는 것으로 나중에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하고 나 사이에, 당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가 4명이었는데 그 4명 모두를 조국 수석이 직접 한 명 한 명 인터뷰를 해보고 당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검찰개혁에 대한 각 후보자의 의지나 생각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조국 수석이 4명을 다 만나본 결과 나머지 3명은 전부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

견을 분명히 밝혔고 윤석열 후보자만 말하자면 검찰개혁에 대해 지지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소통에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검찰개혁의 지만점은 어쨌든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했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는 중앙지검장 할 때 검찰개혁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 적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을 언급하면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며 “한없이 미안하다”고도 언급했다고 한다. 그는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조국 후보자 일가에 대한 수사는 명백히 조국 수석이 주도했던 검찰개혁 또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더 강도 높게 행해질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이고 발목잡기였다”고 했다.

이어 “그 바람에 조국 장관 후보자 가족들은 이른바 품비박산이 났다”며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할 때 가장 지지한 사람이 조국 수석이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으로 발탁할 때도 조국 수석이

팬이 되어준 셈인데, 거꾸로 윤석열 당시 총장으로부터 그런 일을 겪었으니 참으로 인간적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했지 않았다. 너무나 수준 낮은 정부, 이번 계엄 이전에도 그냥 정말로 참 못하고 수준 낮은 정치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자괴감, 그렇게 아주 크다”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아 정말 국민한테 참 송구스러웠다”며 “이번 탄핵, 계엄 사태가 생기고 나니가 정말로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기분조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 오는 것이 민주당의 역사적 책무”라며 “민주당이 이기려면 좀 더 포용하고 확장해야 한다. 경쟁을 자주 분열로 비판하며 밀쳐내는 건 민주당을 협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엔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없다. 그럴수록 확장해야 한다. (설 연휴 때 찾아온) 이 대표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고, 이 대표도 나와 생각이 같다”고 덧붙였다.

/뉴스1

“전주 청년 만원주택사업, 로또 위험 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에서는 10일 전주시에 청년 만원주택사업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우선, 전주시가 밝힌

공급 계획은 2028년까지 210호에 불과하다.”며, “전주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극히 일부 청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다수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닿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일부 당첨자만 해

택을 보는 ‘로또 정책’이 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서 “더 큰 문제는 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다.”며, “전주시는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주택을 매입·신축·리모델링한다고 발표했지만, 초저가 월세(1만~3만원)만으로는 유지·관리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만호 기자